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인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88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9. 15.

발 의 자 : 권인숙 · 송영길 · 유정주
장혜영 · 임오경 · 허영
윤미향 · 김영배 · 윤후덕
진선미 · ~~이수진~~(비) · 이수진
이탄희 · 신동근 · 김진애
심상정 의원(16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국가기관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·시행 등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. 또한 직무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신고 시 이를 은폐·축소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.

이에 국가기관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, 국가기관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 현장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

등에 이바지하려고 함.

주요내용

가.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의4 신설).

나. 국가기관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에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, 국가기관등의 장과 종사자의 성폭력사건 은폐·축소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(안 제9조제2항 신설 등).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공공단체의 장”을 “공공단체의 장(이하 “국가기관등의 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4(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)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,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건 발생을 통보받은 경우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의 점검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

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고할 때 그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8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,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,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·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,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공공단체 의 장(이하 “국가기관등의 장” 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② ~ ⑪ (생략)	② ~ ⑪ (현행과 같음)
<신설>	제5조의4(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)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

제9조(신고의무) (생략)

<신설>

하고,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건 발생을 통보받은 경우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의 점검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신고의무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

<p>제38조(과태료) ① (생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<u>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고할 때 그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제38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</u></p> <p><u>1의2.</u> (현행 제1호와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